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04. 15.

**자치행정위원회**

#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원주영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답례품 제공 비용 충당 근거를 마련(안 제9조제3항)
- 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행사 등 사업추진 근거 및 참여자 등에 기념품·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4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
- 라. 입법예고 : 2025. 4. 4. ~ 2025. 4. 10. (6일간)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열악한 재정 확충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답례품 제공 외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수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활성화 사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을 포함한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공모전이나 홍보행사 등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는 물론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행사 및 공모전 등의 추진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현황 (2024년 12월 31일 기준)

총 기부 현황(기금개설~현재) : 1,932건 / 185,106,000원

### □ '24년 기부 현황

기부금액				비고
누 계		주 간(12. 23. ~ 12. 31.)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1,000,000원 : 0건 - 500,000원 : 0건 - 150,000원 : 1건 - 100,000원 : 255건 - 100,000원 미만 : 3건
1,052건	105,411,300원	259건	25,816,000원	

※ '23년 총 기부금액 : 79,694,700원(2023. 1. 1. ~ 2023. 12. 31.)

### □ '24년 답례품 선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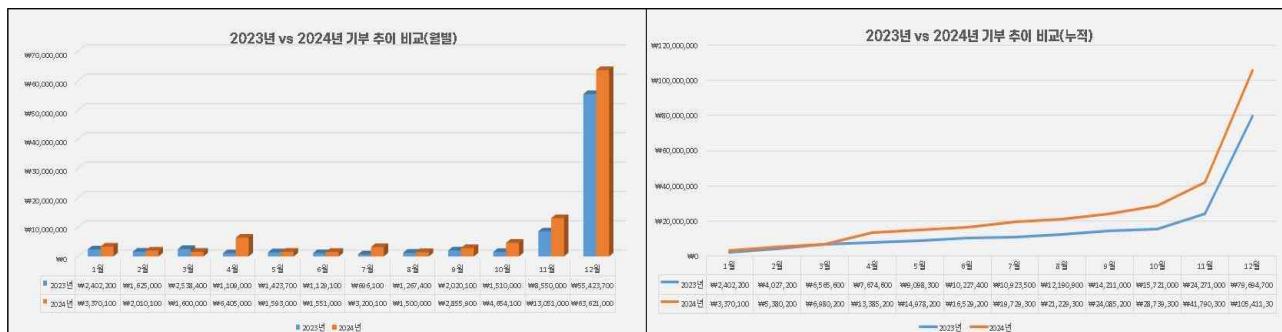
누 계				주 간(12. 23. ~ 12. 31.)			
남양주사랑상품권		농·특산품 등		남양주사랑상품권		농·특산품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04건	12,290천원	318건	9,146천원	품절 (지출마감)	-	97건	2,910천원

※ 답례품 미선택 현황 : 330건

### □ '24년 기부자 주소지 현황(수도권 84.6%, 비수도권 15.4%)

기부인원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052건	누계	452	408	12	30	9	1	13	6
	주간	108	110	2	3	3	-	6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비고
	누계	25	16	21	8	11	18	11	3
	주간	2	7	5	1	1	7	3	-

• 경기 452건 > 서울 408건 > 인천 30건 > 강원 25건 > 충남 21건 > 경북 18건 > 충북 16건 > 대전 13건



## 참고자료

## 2024년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실적

시·군명	누적 기부건수(건)	누적 모금액(원)	순위
합 계	53,683	5,456,240,630	
안성시	6,365	668,897,400	1
화성시	5,504	537,249,700	2
수원시	4,508	430,952,630	3
성남시	3,238	417,239,600	4
연천군	1,978	243,277,600	5
안양시	2,308	219,804,700	6
용인시	2,256	214,047,700	7
양평군	1,736	188,487,700	8
이천시	1,826	172,327,800	9
고양시	1,685	165,371,300	10
여주시	1,722	162,381,400	11
평택시	1,698	161,488,200	12
의정부시	1,605	155,285,200	13
부천시	1,443	137,766,100	14
광명시	1,266	125,162,600	15
김포시	1,283	124,497,000	16
시흥시	1,290	124,308,500	17
양주시	924	115,137,000	18
경기도	1,113	111,162,100	19
남양주시	1,052	105,411,300	20
가평군	1,023	103,412,100	21
안산시	1,061	103,237,900	22
포천시	898	92,107,500	23
파주시	928	91,474,400	24
의왕시	813	78,672,100	25
군포시	780	77,558,700	26
하남시	758	74,329,000	27
동두천시	635	61,485,700	28
광주시	614	59,463,100	29
구리시	593	57,649,900	30
오산시	383	38,699,500	31
과천시	397	37,895,200	32

## 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정비(안 제7조)

- 모금 방법으로써 기존에 금지되던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SNS메시지 등)와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독려를 허용

## ②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안 제8조제3항)

- 현 연간 기부상한액인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확대

## ③ 고향사랑기금 관련 제도정비(안 제8조의2 신설, 안 제11조제2항)

- 지정기부 근거 명문화 및 현재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답례품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기부금의 30% 범위 내)할 근거 마련

## ④ 등록외국인 체류지 주소 등 자료제공 요청 근거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 행안부장관·지자체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기부자의 체류지 정보 등 자료제공을 요청(기부자 주소지 확인 필요)할 근거 신설

## ⑤ 행안부장관·지자체장의 제도홍보 책무 신설(안 제12조제1항 신설)

- 행안부장관·지자체장의 홍보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신설

## ⑥ 부칙

- 법률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단, 개정 조항 일부\*는 대통령령 정비가 필요하여 6개월 후 시행  
\* 모금방법(제7조제1항), 답례품비 기금 충당(제11조제2항본문·제4항)
- 또한,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제3항)은 '25. 1. 1.부터 시행  
※ 상한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호별 방문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업무를 위한 장소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기 위해 개별적인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모금의 횟수는 수신자별로 분기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  
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담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  
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  
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  
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24조(기부금 제도 활성화) ①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관련 교육 및 행사

2.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기금사업 관련 공모전

3. 그밖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이나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3. 미 첨부 사유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 비용으로 사용 및 기부금 제도 활성화 조항에 따라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구체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4. 작성자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장 문명우